

공사 맡을 업체가 없네...광주 도시철도 2호선 차질 심각

2단계 구간 7·10공구 도로 좁고 난공사에 기피...3차례 연속 유찰 현장 조사조차 못해 개통 더 늦어질 듯...수의계약 고육책 모색도

광주 도시철도 2호선 2단계(광주역~첨단~시정·20km) 일부 구간 공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2단계 구간 공사를 맡을 업체 공고를 냈지만 일부 구간에서 3차례 유찰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초 공사를 시작해 5년 뒤인 20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미 3차례나 유찰돼 6개월 이상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11일 광주교통공사에 따르면 광주지하철 2호선 2단계 공사 구간(7-14공구) 중 7공구와 10공구의

공사 업체모집 공고가 3차례 유찰돼 4차 공고를 앞두고 있다.

올해 1월 공사에 착수한 2단계는 광주역~전남대~일곡지구~본촌산단~첨단지구~수원지구 구간을 연결하며 총 사업비 1조 5036억원(국비 9021억원, 시비 6014억원)이 소요된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은 1단계(광주시정~광주역·17km)와 2단계, 3단계(백운광장~효천역·4.8km)로 진행된다.

3단계는 착공 여부가 정해지지 않아 완공 시점이 불투명하지만, 1단계는 2026년, 2단계는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잡고 있다.

당초 2023년 개통 예정이었던 1단계공사도 3년 가량 늦어졌지만, 2단계도 이미 6개월 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대를 지나는 7공구와 본촌산단에서 양산동을 지나는 10공구가 수차례 유찰되고 있다는 점에 서다.

광주시는 해당 공사구간의 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이어서 조달청을 통해 업체 모집에 나섰다. 지난해 8월 20일 8개 공구에 대한 공고를 냈지만, 7·10공구는 유찰됐다.

이후 같은해 11월 10일 재공고에도 두 곳은 유찰됐고, 지난해 12월 21일 3차 공고에서도 공사를 맡을 업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이은 유찰의 이유는 7·10공구는 도로가 좁

고 차량과 유동인구가 많아 시공 난도가 높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2단계 공구 중 2개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는 모두 업체가 선정돼 현장 조사가 실시되고 있지만 7·10공구는 현장조사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통 지하철 공사의 80%는 토목공사이고 나머지 20%는 건축·전기 공사 등이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토목공사에만 5년 가까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한다.

전국 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2개 공구 공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유찰된 바 없이 모든 공구가 원활하게 진행됐음에도 1단계 공사가 지연돼 지역민들의 교통 피로도 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2단계 공사까지 지연된

다면 지역민들의 불편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교통공사는 반복되는 유찰을 막기 위해 공사 실적 조건을 100%에서 70%로 하향했고 지역업체 참여 의무비율도 49%에서 40%로 낮추고 조달청에 4차 공고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유찰이 반복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해짐에 따라 6개 공구를 수주한 롯데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디엘이앤씨, 상용건설 측에 수의계약을 의뢰하는 안도 고려해 보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생각이다.

광주교통공사 관계자는 "2단계 공사에서 지연 소지는 있으나 2단계 공사 자체가 선형으로 연계돼 진행되는 만큼 공사가 반드시 늦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전공의 집단이탈 3주째인 11일 오전 광주시 동구 조선대병원에서 응급환자들이 복도를 지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이탈이 장기화하자 지역 거점공립대 병원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했다. /니영주기자mjna@kwangju.co.kr

공보의 차출 딜레마...전남은 의료 공백

23명 타지역 파견에 지역 19개 보건지소 공보의 무더기 공석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놓은 공중보건의(공보의) 차출 대책이 되레 지역 공공의료 기반을 취약하게 만들고 의료사고 위험을 높일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 정부가 의료 취약지역인 전남지역에 근무하는 공보의 23명을 상급병원으로 보내 전남 19개 보건지소의 공보의가 무더기 공석 상태다.

1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 지침으로 전남에 근무하는 공보의 267명(의학 분야) 중 8.6%인 23명이 서울, 광주, 충북 등 도시지역 병원으로 4월11일까지 파견됐다.

통상 보건지소에는 2~3명, 보건지소에는 1명의

공보의가 근무하지만 이번 파견에 보건지소 공보의가 4명, 보건지소 공보의 19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7명), 서울 아산병원(7명), 화산전남대병원(6명), 전남대병원(1명), 충북대병원(1명), 서울 국립중앙의료원(1명)에 배치됐다.

결국, 전남 19곳의 보건지소에는 공보의가 없게 된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응급상황을 고려해 섬지역 공보의는 파견대상에서 제외하고 내륙 지역 공보의 위주로 파견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공의료가 취약한 전남의 경

우 공보의들이 다른 지역과 상급병원으로 파견되지 않도록 배려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보의 차출로 공백이 생긴 보건지소에 오는 환자들을 위해 인근 사군 보건소에 순회진료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전남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정부에 보건기관의 비대면 원격진료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대병원에서 숙련도가 낮은 1년 차 간호사를 대거 수술실 진료 보조(PA) 간호사로 배치해 병원 노조 측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전남대병원이 최근 폐쇄한 병동의 진료과 간호사 62명(분원 45명·분원 17명)을 한꺼번에 PA 간호사로 신규 발령 냈다"고 "일반간호사가 PA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는데, 숙련도가 낮은 간호 인력까지 PA 간호사로 발령 낸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사건인사이드

군대 안가려고 억지로 살뺐다가...징역형

음식·수분 섭취 억제 억제 몸무게 50.4kg 유지...집유 2년 선고

사회복무요원(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 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살을 뺐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현역병 입영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체중을 감량해 신체등급 4급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몸무게 54kg였지만 음식과 수분 섭취를 극도로 억제하는 수법으로 4.6kg를 감량했다가 지난 2022년 2월 신장-체중 재측정 검사시점까지 50.4kg를 유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르면 4급 보충역 판정 기준은 키와 몸무게를 토대로 비만도를 나타내는 BMI(체질량지수)

지수 '16미만, 40이상'이다. A씨는 여기에 해당했다.

A씨는 "대학에서 제적되고 대입 3수 도전에 실패하는 등 스트레스를 받아 불규칙한 생활을 한 탓에 체중이 감소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이미 지난 2020년 12월부터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알고 여러차례 SNS대화방에서 체중을 줄여 보충역에 해당하는 신체등급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 소변검사결과 단식과 탈수로 체중감량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서 등을 토대로 병역의무 감면 목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지 않는다 고의로 체중을 감량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잠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보조금 빼돌려 채무 갚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징역형

광주지법, 집유 2년 선고

장애인 복지사업 보조금 8000만원을 빼돌려 개인생활비, 카드대금 납부,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사회복지사업법 위반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시 광산구에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운영

하는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부터 지난해 1월까지 86회에 걸쳐 보조금 8000여만원을 빼돌려 개인생활비, 카드대금 납부,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보조금을 센터 예수금(임시로 보관해두는 자금) 계좌로 이체한 후 다시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범행기간과 횡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한사람의 보험비로
전국민의 경제부담 줄이

보험사기 ZERO

- 고의로 보험금을 노린 생명·신체 훼손 행위 NO!**
- 허위 사고, 허위 진단, 과다 입원 행위 NO!**
-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NO!**
- 고의 교통사고, 차량 수리비 과다 청구 행위 NO!**

신고 방법

금융감독원 콜센터
국번없이 1332 ▶ 4번 ▶ 4번

각 보험회사 대표번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 ▶ 보험사기 신고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처벌 사항

10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적용)

신고 포상금

적발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원 지급

경찰청
 금융감독원
 h-well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IAA 한국보험대리점협회